보도시점 2025. 8. 20.(수) 11:00 배포 2025. 8. 20.(수) 08:00

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되, 안전 불감기업은 퇴출토록 제도개편, 혁신제품 5천개 지정·혁신 제품 보증 특례 도입 등 공공조달 생태계도 혁신

- ①간접노무비 상향 등 안전관련 비용 현실화, ②적정 공사비 반영을 통한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지원, ③중대재해 발생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
- ①'30년까지 혁신제품 5,000개 지정, ②연간 3조원 수준 공공구매 확대, ③혁신제품 보증 특례 도입('25.9월) 등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도 공세적으로 확대

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.20.(수) 10:00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**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**를 개최하여 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, ②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최근 **연이어 중대사고**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**재해 근절**을 위해 **공공부문**이 **선도적**인 **역할**을 수행하는 한편, AI 등 기술 기반 **혁신기업**이 **빠르게 조달시장**에 **진입**하여 안정적으로 **성장**할 수 있도록 **제도적 지원**을 한층 **강화**하기 위한 **목적**으로 마련되었다.

1.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

건설현장에서 **중대재해**가 잇따라 발생하여 **국민 불안**이 높아지는 가운데, 정부는 **중대재해 근절 및 예방**의 **실효성**을 **제고**하기 위한 공공계약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.

이번 개선안은 입찰, 낙찰자 평가, 계약 이행 등 **공공계약 과정**에 **안전 최우선 원칙**을 **제도적**으로 **내재화**하고, 공사비 상승과 경영 부담 속에서도 **기업**이 **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**를 **지속**할 수 있도록 **지원책**을 **균형 있게 추진**하는 동시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**강력한 제재**를 통해 **기업의 안전**에 대한 **경각심**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
계약관련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

먼저, 입찰 및 낙찰자 선정시 **안전 평가 반영**, 기업의 **안전 관련 비용 확보**, **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**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. 우선, 현재 **제한경쟁**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데, 여기에 **안전분야 인증, 안전 전문인력** 및 **기술 보유상태**를 추가하여 안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 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.

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**안전 평가**를 **강화**한다. 우선,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시 **중대재해 위반 항목**을 **감점 항목**으로 신설한다. 그리고,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·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**시공평가 항목**을 종래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(100억~300억원) 사업에도 도입한다. 그리고,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**배점제로 전환**할 계획이다.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낙찰자 선정시 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계획이다.

더 나아가, 현장의 안전 관리 조직 및 인력 확대,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, 구조적 안전성 점검 등 **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**를 위해 간접노무비, 안전관리비 등 **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**을 **안정적**으로 **확보**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**적용 기준 상향**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, 현 기준도 **준수하지 않거나, 누락**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정비한다.

또한, **공사 현장**에서 **안전문제**가 발견될 경우, **계약상대자**(건설사)가 **직접 공사 일시정지**를 **요청**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의 **안전관리 체계를 강화**할 계획이다.

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

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**뒷받침**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,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**전반적인 기업부담을 완화**하는 **지원책**도 **촘촘하게 마련**하였다. 시공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**장기계속공사 지연** 시 공기연장비용을 **지급**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. 또한 **적격심사 대상 공사**(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)의 **낙찰하한율**을 **상향**(+2%p)해 **적정 공사비**를 보장하는 한편, **물품**구매의 **낙찰하한율 상향**도 **향후** 추진키로 하였다. 아울러, **기술입찰 유찰시 기본·실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**을 **반영**하고, **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%에서 10%로 완화**할 계획이다.

중대재해 발생시 제재 강화

위와 같은 **전반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**에도 불구하고 **중대재해**가 **발생**하는 **안전 불감 기업**에 대해서는 **공공입찰 참여**를 **엄격히 제한**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, 이를 확대하여 **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**에도 제한하는 한편, **제한 기간 확대**, 반복적인 사고 발생시 **가중처벌 강화**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. 또한,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**법인분할**이나 **명의 변경**을 통한 **제재 회피를 차단**하기 위해 **제재 효력이 승계**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. 향후 고용부,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·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효적인 **제재 방안** 및 관련 **법률 개정안**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.

임기근 차관은 "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**계약 과정**의 **안전 관리 체계 강화**, **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**과 함께 **중대재해 기업**에 대한 **강력**하고도 **실효적**인 제재라는 **세 축**을 **동시에 추진**한다. 이를 통해 **안전**을 **기업 경쟁력**의 **핵심 요소**로 **정착**시키고, **안전 불감 기업**은 **공공입찰시장**에서 **퇴출**되도록 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정부는 금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**즉시 제도 개선**에 **착수**하여, **계약법령 및 예규**는 **올해 11월**까지 **개정**을 **완료**할 계획이다. 아울러 **법률 개정**은 **금번 정기국회 내 통과**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.

2.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방안

정부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'30년까지 연간 **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**를 3조원 수준('24년 기준 10,220억원)까지 확대하고, **혁신제품도 5,000개**('25.6월 기준 2,508개)까지 추가 발굴·지정할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**'공공조달 길잡이'를 활성화**하고,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**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**한다.

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**벤처나라 지정대상**을 기존 벤처·창업기업에서 **청년·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기업**으로 늘리고, 올해 말까지 **혁신제품 지정기관**을 16개에서 **18개**로 **확대할 계획이다**.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그간 공공성(매출) 심사 이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**절차**를 **단축·효율화**하고, 기업신청 **혁신제품 지정 횟수도** 연 3회에서 **4회**로 **확대**한다. 이와함께 초기 혁신기업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, **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**도 2025년 9월 중 도입한다.

우수제품 지정시에는 '**AI 분야**'를 신설하여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며, 고가의 장비나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 판로확대를 위해 **임대(구독) 방식도 수의계약이 가능**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('25년 시행)하였으며,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.

마지막으로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**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(G-PASS)**를 개선하였으며, 이를 통해 **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을 지원**할 계획이다.

임차관은 **"공공조달 시장**에서 **가장 혁신적인 제품**은 **혁신 조달제도** 그 자체임.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**혁신 조달제도**의 **공세적인 확대 개편**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	책임자	과 장 노판열(044-215-52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성희(balbali000@korea.kr)

< 안건별 담당자 >

[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]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	책임자	과 장 강경구 (044-215-5210)
		담당자	사무관 이종민 (jmlee88@korea.kr)

[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]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	책임자	과 장 노판열 (044-215-52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중민 (pymwm@korea.kr)
담당 부서	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	책임자	과 장 박한도 (042-724-7305)
		담당자	사무관 도미영 (sky97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